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전략 : 민영화를 중심으로

김미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민영화의 경제적 논의
- III. 민영화 과정
- IV. 민영화 현황 및 정책 추이
- V. 결론

초 록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 발전된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신생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 체제전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정부는 주택과 소규모기업을 신속하게 민영화하고 가격자유화 조치를 수년 동안 추진했다. 하지만 경제의 자원배분 및 국제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했다. 대규모 기업의 민영화는 유예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는데, 우즈베크 정부는 종종 공식적인 민영화가 진행된 후에조차 대규모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했다. 정부는 공적 기업이든 공식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이든, 대기업에 대해, 그리고 면화와 곡물생산에 대해 중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미흡하지만 이러한 민영화 과정을 걸쳐 우즈베크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우즈베크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민영화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민영화의 전반적인 과정과 현황, 현 정책 추이를 살펴 보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민영화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민영화만을 주제로 한 논문은 없었기 때문에 짧지만 쉽게 우즈베키스탄 민영화의 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우즈베크은 폐쇄적인 경제정책인 수입대체화정책을 약 10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투자환경이 취약했고, 제도의 미흡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보다는 외국인 간접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CIS국가 중 가장 부진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06년 7억 달러, 2007년 10억 달러, 2008년 14억 달러, 2009년 25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FDI 유입액은 24.3억 달러로 추정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억 4천만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교통인프라 분야에 1억 5천만 달러, 방직 분야에 1억 달러 등이 투자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FDI 유입, 즉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발전 수단으로 민영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즈베크 민영화의 기본 목적은 다양한 경제부문의 구조 개혁 가속화, 민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확대 및 역할 강화, 해외 자본 도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발전,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영화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논의부터 민영화의 과정과 특징, 그리고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민영화의 경제적 논의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논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영화가 단행될 경우 기업 내에서의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efficiency)이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적 효율성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민영화는 대부분이 재정적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위탁할 경우 국가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셋째, 민영화는 국영기업과 달리 소비자에게 높은 질을 보장하면서도 적정가격에 재화, 서비스 공급을 보장해줄 수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를 억제할수있을것 이라는주장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민간기업의 효율성 우위론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민영화가 경쟁적 시장을 확대하기는커녕 불공정한 민영화 과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대한 사적 독점화만을 야기하거나, 주로 수익성이 높았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부문 노동자에게 지원되던 보조금을 재벌이나 특정 관료집단과 연고 관계에 있는 민간 부문의 매입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유용하였던 경험적 사례로부터 제기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적 시장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민영화가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위한 민영화가 불가피 했다.

Ⅲ.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과정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경제정책을 유지하여 경제정책에 있어 외국인 투자정책은 많은 제약과 한계를 내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일련의 민영화 과정은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수단으로서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요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민영화는 우즈베크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의 구분 없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수단으로 진행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외자 유치 및 투자 유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전후로 대통령령이나 내각명령 등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 개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 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개혁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4년 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유화 및 사기업의 활동 추진을 촉진시키며, 주식회사를 공개하고, 개인의 은행구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외국인 기업이 50% 이상 출자할 때 외국인 기업에 대해 5년간 세금을 면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95년 중반까지 세금을 면제하였다.

1997년에는 1/4분기중 정부자산의 판매규모가 전년 대비 230%의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판매건수도 298건에 9백만 달러에 이르러 정부의 민영화 사업 규모가 약 600건 이상, 40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자산위원회가 민영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정부와 연계하여 민영화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 및 기업지원책을 연구, 개발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 사업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민영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여 합작 및 외국기업의 불법외화반출 및 탈세가 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년 5월 24일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달러은행구조와 현지화 구조만을 개설하여 이용하게 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이 법령은 그 동안 묵과하였던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1998년, 우즈베크 정부는 국영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내각결의 477호를 발표, 외국인의 국영기업 인수 참여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결의의 주요내용은 대규모기업의 전체가 아닌 사업부문별 매각을 허락 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100% 주식인수 허가, 인수한 주식을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뿐 아니라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곤란하게 여겨왔던 부분을 과감히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라 이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던 30개의 기업은 분리 매각되고 69개의 기업은 외국인기업이 100% 주식을 인수하게 되고 159개 기업의 외국인 주주들은 장외시장에서 기존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정부는 2005-2006년 중 민영화될 기업들에 대한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은 총 355개 기업으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들 민영화 대상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UzbekYenigilSanoat(우즈베크경공업부), UzStroyMaterialy(우즈베크 건축자재), UzAgroMashService(우즈베크 농업기계 서비스), MasloJirTabakProm(유지, 오일 및 담배산업), UzbekNefteGaz(우즈베크 오일 및 가스) 그리고 Uzbeksavdo(우즈베크 통상) 등의 국영 기업에 속해 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모두 9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UzbekIpagi(우즈베크실크) 산하 1개 기업, 청산 처리된 Uzbalik(우즈베크어업) 1개 기업, Mahalliy Sanoat(지역 산업) 산하 3개 기업, Syrdarya 자동차 운수 협회 산하 1개 기업 그리고 공보청 산하 2개 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제로 상환 가치로 인도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우즈베크 정부의 주식 보유 지분이 51%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들로 UzPakhtaSanoat(우즈베크 면방공업), Uzdonmahsulot(우즈베크 곡물), UzbekNefteGaz(우즈베크 오일 및 가스), UzbekEnergo(우즈베크 에너지), UzKimyoSanoat(우즈베크 화학산업), Uzmevasabzavotuzumsanoatholding(우즈베크 과일, 야채, 포도 산업 홀딩), UzAgroMashService(우즈베크 농기계 서비스) 및 TashGorPassTrans(타슈켄트 도시교통공사) 등이다. 이중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정부 보유 주식 지분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별 일부 주식만 매각되었다. UzbekEnergo(25% 매각), UzbekNefteGaz(20% 매각), UzKimyoSanoat(19%), UzPakhtaSanoat(18%) 그리고

UzAgroMashService(9% 매각)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도 민영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된 자산은 1억148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4배가 증가했다. 자산이 매각된 우즈베키스탄 공기업수는 2006년도 22개에서 2007년도 28개로 증가했으며, 지분인수 대금과는 별도로 외국기업이 인수기업 현대화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금액은 1억3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장 규모가 큰 투자는 스페인의 막삼(MAXAM)그룹이 Elektrokhimprom(전기화학)사의 지분 49%를 2200만 달러에 인수한 건이며, 향후 5300만 달러를 이 기업 현대화에 투자하였다. 한국기업으로는 신동에너콤 주도의 컨소시엄이 철도냉장 차량기업 Dorrefrans의 지분 47%를 1750만 달러에 인수했고, 향후 600만 달러를 현대화에 투자하였다. 이외에 러시아 모노리트(Monolit)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페르가나 지역 인산염 공장지분 85.2%를 38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러시아 프레스베트 인베스트(Peresvet-Invest)사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엘리베이터 제조기업 지분 75%를 130만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타슈켄트시 외곽에 있는 요양원 시설 3개에 5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또한 2007년에는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던 민영화를 바로 잡기 위해 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민영화는 2007년 7월 20일 공포된 대통령 결의안 No. pp-672 '2007-2010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민영화 강화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두며 내각에 책임권한이 부여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우즈베크 정부는 더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경제개혁을 위해 추가적이고 보다 세분화된 '민영화 관련 법'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IV. 민영화 현황 및 정책 추이

민영화는 위의 과정과 같이 독립 이후인 91년도부터 진행되어 2008년까지 84,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2000년 이후 진행된 민영화의 경우 대규모 거래로 진행되었고 전자통신산업, 에너지 산업, 전력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로 확대되었다.

2009년, 민영화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규모는 326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년도 말까지 등록된 국가자산 총 임대 계약건수는 7101건에 이르렀다. 또한 2010년에는 총 96개(건), 약 8905만 달러 규모의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외국인투

자규모는 761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는 총 62개(건)의 국가자산이 민영화됐으며 그 규모는 1억980만 달러로 이 중 외국인투자규모는 1억346만 달러였다. 산업 부문별로는 공업 80%, 건설 88.4%, 통신 96.6%, 농업 99.9%, 무역 99.9% 비율로 민영화가 진행됐으며 국내총생산에서 민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를 웃돌았다. 민영화된 기업 중 68.5%의 기업이 민영화 전보다 수익이 증가해 민영화는 현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민영화의 기본 원칙은 첫째, 공개입찰을 통한 자산 매각, 둘째, 동등한 입찰 참여를 보장하는 민영화, 셋째, 제도의 건전성 및 간소화, 넷째, 민영화 준비 단계 기업 활동 효율성 제고, 다섯째,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확립이다. 이 원칙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사업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마련 2~3년 주기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진행되며 민영화 사업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승인된다. 부실기업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약정 하에 구매가 제로 조건의 입찰이 진행된다.

민영화 참여 절차를 보면 경매는 최소 '한 달' 전에 공표가 된다. 경매 참여 조건으로는 경매시작일 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경매참여금으로 구매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선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매낙찰사(구매자)는 경매참여금을 제외한 낙찰구매가의 15%를 경매종료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할부 또는 일시불로 낙찰금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민영화 부문 외국인투자 혜택에는 관세 감면 및 투자액, 산업분야에 따라 2년에서 7년까지 소득세 면제, 국내 생산품 수출량 증가 시 관련 관세 감면 및 재산세, 수출로 인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이후 2년간 토지세 면제, 국내 생산 시작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및 생산 공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 관세 50%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자산위원회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민영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투자한 국가들을 보면 EU가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역시 에너지와 통신, 화학 산업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진출이 진행 중이며, 중국 역시 체신산업, 우체국을 비롯한 정부의 기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V. 결론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경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해 2000년 이후, 일관적이고 점진적인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다. 정부는

기존 공공재 시설 확충 및 확대와 개발에 투자할 자본의 부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으며, 천연자원을 이용한 개발 및 수출을 장려하며 민영화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투자 보장 및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즈베크 경제발전과 외자 유치 수단으로서 국가의 민영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 상반기에만 이루어진 민영화 규모가 총 1억980만 달러에 이르며, 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 중이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로 제조업 발전 및 선진기술 도입을 꾀하는 실정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계약이 이루어 진다는 것과 부가가치가 높은 전화·통신사업 부문에는 민영화를 통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채산성이 없는 교통·철도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안정화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법정 보장 시스템 마련, 개인 사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처럼 현재 민영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앞으로 우즈베크의 외자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우즈베크의 민영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과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우즈베크 수출 및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우리 기업이 우즈베크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대우즈베크 진출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막 접어들었다고 본다. 초창기의 동남아 지역 중심의 소규모 투자에서 벗어나 현재는 인근의 중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지역적 다변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해진 민영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정책을 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기업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전히 인프라 낙후와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즈베크의 외화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합작으로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한국의 종합무역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03
- KIEP,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 평가와 경제발전 전망』, KIEP 세계경제 10월호, 1999년
- 김경, '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5년
- 김성욱,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 정책연구: 2000년 이후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 박은홍, 『발전도상국 공공경제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7년
- 심의섭,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동연구 제 1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이종섭, '우즈벡 민영화 현황 및 추이', KOTRA, 2011-07
- 서강석, '우즈벡 공기업 민영화 획기적 조치 발표', KOTRA, 1998년
- 송방달, '우즈벡, 2005-2006년 민영화 계획 확정 발표', KOTRA, 2005-05
- 이명구, '우즈베키스탄, '07년 12억9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KOTRA, 2007-03